

CEDAW_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사전 질의목록에 대한 시민단체 제출 정보

작성단체

장애여성공감¹

한국장애포럼²

Contact

Eunsun Jin(EMPATHY)

wdc214@gmail.com

Hanbyol Choi(Korean Disability Forum)

kdf@thekdf.org

+82-10-2883-7280

The present report was developed following information sharing by and with technical guidance by the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Secretariat.

¹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DE) was established in 1998 to advocate for the human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It deovtes to create a society that sees disabled women as equals but also respects their choices and decisions, working alongside other minoritized groups to bring about social change.

² Korean Disability Forum(KDF) is a coalition of Korean disability organizations focu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ople. It was established in 2012 and has ECOSOC Special Consultative Status since 2021. The main purpose of the organisation is to promo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disability framework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협약 제5조, 8차 최종전해(CEDAW/C/KOR/CO/8) 23(b)문단 관련)

1.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통합 지원 부재

1. Comprehensive support for the victims with disabilities of domestic/gender-based violences

1) 현황

-한국의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³하는 등,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⁴을 수립중임.

-폭력피해 장애여성의 경우 특히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지원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는 부족하나마 폭력피해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왔다⁵. 한국 정부는 당사국 보고서(CEDAW/C/KOR/9) 제 75, 76문단에서 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소, 보호소(운영을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들은 모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이후 폭력피해 여성, 특히 교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전담 부처 설립 및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여성가족부가 폐지 될 경우 장애인 가정/젠더기반 폭력 피해자 정책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쪼개지며 통합적 지원이 불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됨⁶.이때문에 폭력피해 여성 지원 단체들은 지금도 현저히 부족한 폭력피해 여성 지원 제도가 여가부 폐지 이후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⁷, 566개 현장 지원 단체들은 여가부 폐지 이후 폭력피해 여성 통합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⁸.

2) 질의 목록 제안

-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교차적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의 폭력피해 통합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성폭력 피해자지원 인프라 부족

1) 현황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현황에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인구 대비 폭력피해가 심각함에도, 장애여성 피해자의 상담 시설은 이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

³ <https://www.bbc.com/news/world-asia-63905490>

⁴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2/10/356_337406.html

⁵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140608000546>

⁶ Currently, the Ministry of Welfare is the main implementation department of disability policies and it is new government's plan to transfer the function of supporting victims of domestic/gender-based violences to the MOJ.

⁷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48263.html

⁸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3>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2021여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배우자나 연인 등으로부터 신체적·성적·정신적·경제적 폭력 및 통제 피해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22.2%로, 같은 피해를 경험한 비장애여성은 15.9%임⁹. 그러나 한국 정부 9차 보고서 66문단과 74문단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412개 중 장애여성 상담소는 32개소로 7.76%에 불과함.

- 일반 상담소 내 장애인 접근성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일반 상담소들은 장애여성의 교차적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채 장애여성 관련 상담을 모두 ‘장애여성’ 상담소로 연계하는 상황임. 서울시내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 중 장애인 전문 상담소가 아닌 곳은 47%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고, 일반 상담소 종사자 중 58.1%가, 일반 보호시설 종사자 중 30.4%가 장애인 피해자를 장애인 전문 또는 장애인 상담이 가능한 기관에 연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¹⁰.

2) 질의 목록 제안

- 현재 운영중인 모든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기관을 다양한 장애 유형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장애여성 특화 상담소 투입 예산 증액 계획 및 인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 UN CRPD 2,3차 권고 36단락(c) 참고

3. 쉼터의 시설화

1) 현황

2021년 성폭력피해자보호소 거주자 256명 중 145명(56.64%)가 장애인으로 절반이 넘으며, 2021년 기준 보호소 3년 초과 거주 67%가 장애여성이고, 보호소 방문 장애여성 중 32.5%가 3년 이상 보호소 거주¹¹
-거주 시설 및 가족으로부터 인한 폭력 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쉼터 지원 및 자립 지원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함, 퇴소 후 적절한 지원 체계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은, 장애인 피해자가 오랫동안 보호시설에서만 머무르면서 보호시설이 장기시설화되며, 새로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¹²

시설이 8년이 됐으면, 8년 계신 분이, 10년 됐으면 10년, 6년 됐으면 6년 계신 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장애인 피해자 분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어떤 피해 반복이 되고, 그걸 가족들이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케어도 안 되기 때문에, 퇴소시기가 됐어도, 이 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낼려고 했을 때, 원가정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못 받겠다라고 한다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겠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거의 모든 장애인

⁹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6628.html>

¹⁰ 서울특별시, 2017,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 실태 및 지원 방안>

¹¹ 2021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운영실적(여가부)

¹² 서울특별시, 2017,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 실태 및 지원 방안>

시설이 아까 정원이 꽉 차있고, 초과가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긴급한 그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¹³

2) 질의 목록 제안

- 쉼터 이용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당사국의 자립지원 계획, 지침 및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정부가 2021년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에 쉼터 이용/폭력피해 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자립 및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담기 위한 부처간 협력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 (CEDAW 12조 및 8차 최종견해 37, 41, 43단락 관련)

1. 장애여성의 성과재생산권리

1) 현황.

- 한국의 모자보건법제14조는 낙태를 범죄화 하면서도 우생학적/ 장애차별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¹⁴. 그러나 사실 해당 조항은 장애여성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옹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여성 100%가 자기 의사가 아닌 주위의 권유로 임신중절을 했다고 밝혔다¹⁵.
- 해당 조항과 대체의사결정제도 둘 모두의 결합으로 이러한 ‘외부 결정’ 현상이 발생한다. 민법 제9조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¹⁶. 이에 따라 (1) 발달장애여성의 경우 후견인이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임신중단을 장애여성 대신 선택하고, 심지어 강제불임수술까지 결정하기도 한다
- 또한 법적 역량이 법에 의해 박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공식적으로 피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특히 한국에서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외부결정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즉, 사회적 압력과 부족한 사회적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신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보기에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 대한 공식적 데이터나 통계는 없다.

¹³ 서울특별시, 2017,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 실태 및 지원 방안>

¹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¹⁵ 보건복지부, 2020, 2020장애인실태조사

¹⁶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례 연구

한 연구¹⁷에 따르면, 연구 참가자(장애인)는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에 대한 "외부 결정"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한 발달장애 여성은 "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루프를 낀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안 알려 줬어요."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또한 강제 불임과 피임 절차가 참가자들 자신의 의도와 인식과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임신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모두 가족과 의료진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낙태를 권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이후 관련 입법이 없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¹⁸.

-이에, 장애여성을 비롯한 여성계는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및 장애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 Suggested Questions(질의 목록 제안)

-낙태죄 폐지 이후, 특히 그동안 재생산권리의 심각한 차별을 받아온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계획은 무엇입니까?

- 현재 장애인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실태에 대한 정보 접근과 의료지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이러한 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여성의 성적·생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부결정'의 차별적 관행과 대안적 의사결정(성년후견 포함)의 법적 틀을 폐지하겠다는 당사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추가)

2. 모성권 보호중심의 정책

1) Background(현황)

(crpd 로비페이퍼 발췌;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를 명시하였다 - 한국 정부는 모든 장애여성 임신과 출산 시 출산비용(태아기준, 1백만원)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했다고 밝힘(한국정부 crpd보고서 25문단). 그리고 2018년 현재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힘

¹⁷ 중증장애여성의 성, 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증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¹⁸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41122.html

- 장애여성의 건강 이슈를 임신출산으로 한정짓고, 출산 축하금이라는 일시적인 비용으로 구조적인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한국정부의 임신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모든 여성에게 지원하는 보편정책으로 장애여성 특화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출산한 장애여성은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함”¹⁹ 장애여성이 양육과 동시에 장애여성 당사자를 위한 지원을 병행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에 제한됨. 월경, 피임, 임신중단, 성매개감염을 비롯하여 성적 건강 및 재생산 건강 전반을 포함하지 않음

- 한국정부는 장애여성을 성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제공, 포괄적인 성교육을 학교, 지역사회, 시설 어디에서도 제공하지 않음.

2) 권고 제안

- 임신출산에 한정짓지 않고 모든 생애주기에 있는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장애/여성정책 내에 인권/장애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학교, 지역사회, 기관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포함 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설명하시오(추가)

- (a) 국내 법적 프레임워크는 장애여성과 소녀가 직면한 다중 및 교차 차별을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위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소녀가 경험하는 다중, 교차 차별 데이터나 연구가 부재한 점

기존의 차별 관련 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차별이 금지되는 특정한 사유(차별금지사유) 또는 특정 영역에 서의 차별금지를 규율한다.²⁰

- 장애/젠더를 교차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¹⁹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²⁰ 정의당,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